

요 약

2018년 4/4분기 서울시민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

- 2018년 4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표준화지수 기준 94.4로 전 분기 대비 1.5p 하락
 - 2017년 2/4분기부터 3분기 연속 기준치(100)를 웃돌았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8년 들어 4분기 연속 기준치 이하를 기록
- 2018년 4/4분기 서울의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와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모두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
 - 2018년 4/4분기 서울의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보다 0.3p 하락한 87.4이며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2.7p 하락한 91.1을 기록
 - 1년 후 가구의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'경기 불황'이 31.4%로 가장 많고, 그다음은 '가계소득 감소'(26.7%), '물가 상승'(15.6%), '가계부채 증가'(12.9%) 등의 순
- 2018년 4/4분기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112.1로 전 분기 대비 0.5p 하락하고,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도 96.2로 전 분기보다 1.9p 하락
 - 4/4분기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소폭 하락하였지만, 2014년 1/4분기부터 꾸준히 기준치(100) 이상을 유지하여 서울시민의 소비활동은 비교적 원활
 - 품목별로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를 보면, '교육비', '주거비'는 기준치(100)를 웃돌고, 나머지 품목은 기준치 이하

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BSI는 4개월 만에 하락

-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2018년 11월 「체감경기 BSI」는 전월 대비 4.9p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5.7p 상승

-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12월 「전망경기 BSI」는 86.6으로 전월 대비 5.9p 하락
- 서울지역 전통시장의 11월 「체감경기 BSI」는 62.0으로 기준치(100)를 크게 하회
- 서울지역 전통시장의 12월 「전망경기 BSI」도 74.6으로 기준치(100)를 밑도는 수준

서울시민들이 본 2019년 경제이슈 1위는 ‘청년실업 및 고용문제’

- 2019년 경제이슈로 1순위 및 1~3순위 합계의 응답 결과를 보면, 모두 ‘청년실업 및 고용문제’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
- 1순위 기준으로 ‘청년실업 및 고용문제’가 33.1%로 가장 높고, 그다음은 ‘부동산 경기’(12.6%), ‘최저임금 인상’(9.2%), ‘생활물가 상승’(7.4%), ‘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’(5.0%), ‘남북경협’(4.7%) 등의 순으로 조사
- 1~3순위 합계 결과도 53.4%가 ‘청년실업 및 고용문제’를 지목하였고, 그다음은 ‘생활물가 상승’(29.4%), ‘부동산 경기’(29.0%), ‘최저임금 인상’(27.7%), ‘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’(18.9%), ‘소득양극화’(17.1%) 등의 순으로 응답
- 각 경제이슈가 내년엔 올해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다수 시민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응답
- 13개의 경제이슈 중 기준치(100)를 웃도는 이슈는 ‘4차 산업혁명 대응’뿐이고, 나머지 경제이슈는 기준치 이하
- ‘4차 산업혁명 대응’이 200점 만점에 102.4점을 차지하고, 그다음은 ‘주식시장’(99.7점), ‘남북경협’(98.0점), ‘에너지 정책’(97.5점), ‘부동산 경기’(96.8점) 등의 순이며, ‘소득양극화’가 87.3점으로 개선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

전문가들이 본 2019년 경제이슈 1위도 ‘청년실업 및 고용문제’로 시민 조사결과와 동일

- 2019년 주요 경제이슈 3개를 꼽았을 때, ‘청년실업 및 고용문제’ 응답률이 77.6%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
- 그다음은 ‘최저임금 인상’(28.4%), ‘남북경협’(26.9%), ‘부동산 경기’(23.9%), ‘소득

양극화'(23.9%), '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'(23.9%), '주 52시간 근무제'(20.9%) 등의 순으로 조사

- 2019년에 각 경제이슈가 2018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응답
- 13개의 경제이슈 중 기준치(100)를 웃도는 이슈는 '남북경협', '4차 산업혁명 대응', '에너지 정책' 등 3개에 불과하였고, 나머지 경제이슈는 기준치를 하회
- '남북경협'이 200점 만점에 144.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, 그다음은 '4차 산업혁명 대응'(107.6점), '에너지 정책'(104.2점), '부동산 경기'(84.7점), '주식시장'(80.5점) 등의 순
- 이에 비해 '가계부채'(52.5점), '소득양극화'(53.4점), '저출산 및 고령화'(56.8점), '소비심리 및 내수경기'(58.5점)등은 50점대로 개선이 힘들 것으로 전망

전문가들은 2019년 경기가 현상 유지나 하락으로 예측

-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49.2%를 차지하고, 현상 유지할 것이라 응답비율도 47.6%를 차지한 반면,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3.2%에 불과
- 1년 전 전문가 조사에서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40.5%이고,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20.3%인 것과 비교할 때 대조적
- 이는 미·중 무역마찰 심화,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등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가계부채, 일자리 창출 부진, 소득양극화 심화 등 국내 여건도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
- 2019년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본 요인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, '내수부진'과 '세계 경제 불안' 등이 가장 많이 언급
- 일자리 창출 미흡, 가계부채 확대, 소득양극화,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
- 미국의 금리 인상과 경기하강 국면 진입, 미·중 무역마찰 심화 등 외부여건도 2019년

한국경제에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판단

- 전문가들이 2019년 경기가 현상 유지할 것으로 본 핵심 키워드는 경기 하락 방지를 위한 경제정책
- 경기 하락세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경제주체들의 개선 노력이 경제 성장세를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
- 또한 청년실업, 소비심리, 내수경기 등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, 남북 경제교류가 구체화되고,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서 긍정적 성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

초기 창업기업들에게 공간지원·정보교류가 큰 도움…지원프로그램은 다변화 필요

- 초기 창업기업들은 공공지원 프로그램이 창업 및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
- 창업지원 서비스와 지원정책 등은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
- 특히 창업기업에게는 창업지원시설의 공간 대여, 교육 및 정보교류가 큰 도움
-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지원프로그램의 다변화 필요
- 창업 지원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 업체의 서류작업 부담을 덜고, 지원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
-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2~4년차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, 지원사업을 연계한 성장단계별 지원, 소셜벤처 또는 융합산업으로의 지원대상 확대, 창업자와 동종업계 멘토의 매칭 지원 등 지원프로그램을 다변화할 필요

관광시장 매출은 명동이 전 분기와 같고, 동대문·이태원은 부진

- 4/4분기 명동관광특구 매출은 전 분기(기준=100)와 동일한 수준
- 4/4분기 동대문관광특구 매출은 전 분기(기준=100)보다 소폭 하락한 90~95 수준
- 4/4분기 이태원관광특구 매출은 요식업과 화장품업의 매출 부진 등으로 전 분기(기준=

100) 대비 80 수준으로 부진

- 2018년 4/4분기 중 여행사를 이용해 입국하는 단체 관광객의 수를 조사한 결과, 일본 관광객 방문이 가장 많았지만 전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
 - 10~12월 중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은 182,662명으로 전 분기(197,814명)에 비해 다소 감소(2018년 10월 65,303명, 11월 69,394명, 12월 47,965명 방문)
 - 중국 관광객은 10월 중 2,449명이 방문하였지만, 11월과 12월에는 각각 982명, 975명 방문에 그쳐 방문객이 대폭 감소
 - 동남아 관광객은 10월 4,374명, 11월 5,337명, 12월 4,745명이 방문하여 전 분기(9,534명)보다 많은 14,456명이 방문
- 구매력 저하와 임대료 상승으로 관광특구 상인의 영업 부담 가중
 - 외래 관광객들은 로드숍에서 판매하는 물품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고 있어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
 - 명동의 임대료 상승이 주춤하고 있지만 임대료 인하 기미는 보이지 않아 업종 변경률이 높은 실정
 - 동대문의 소매상권 임대료 구조가 상이한 가운데 대기업 쇼핑몰은 호황기 시절 책정된 임대료 부과로 세입자 부담이 큰 편
 - 이태원 지역도 상권 확장으로 임대료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이에 부담을 느끼는 상인들이 많고, 업장을 유지하기 힘들어 폐업하는 곳도 발생
- 내·외국인 방문을 제고를 위한 관광특구의 환경 개선 필요
 - 명동은 서울 관광지의 상징으로 정기적인 축제를 열어 외래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방문율도 높일 필요
 - 이태원 방문객 및 업주들의 청결인식을 높이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용산구청의 제도 개선 필요